

#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앞선 대응과제 (Ⅲ)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8월호 45쪽에서 계속)

## 차 례

### ● 서 론

1. 축산물 수입개방 배경과 쇠고기 통상마찰
2. 4·8농축산물 수입개방조치와 보완대책
3. 돼지고기통조림 및 소시지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4. 5·28육가공 원료돈육 수입허용조치

### ● 본 론

1. 돼지고기의 최근 국제생산, 소비, 무역동향과 전망
  - 가. 세계 돈육수출시장 전망
  - 나. 세계 돈육수입시장 전망
2. 양돈의 국제경쟁력 비교
  - 가. 비육돈 생산비 국제비교
  - 나. 주요국의 양돈정책
    - 1) 덴마크 2) 대만
  - 다. 돼지고기 수출 원가분석
  - 라. 육가공원료육 수입가격 분석

### ● 결 론

1. 수입개방에 앞선 대응전략
  - 가. 양돈농민의 역할
  - 나. 입법, 행정부의 역할
  - 다. 소비자의 역할

## Ⅲ. 결론

### 1. 수입개방에 앞선 대응전략

#### 가. 양돈농민의 역할

우리나라 축산을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거의 전부가 '97년말까지 개방되므로써 사료원료, 종축, 기자재, 약품 등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다 양축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공형 축산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과 도전하에서 우리 양축농민들은 과연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살아남을 것인가?

첫째, 양돈농민들의 의식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돼지 두당 몇 만원 이상이 남을 것을 기대하고 이런 바탕위에서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을 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가족노동 중심경영을 지향해서 두당 1만원 이하의 마진을 목표로 한 합리적인 경영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원가절감을 위한 농장내적 생산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생체 kg당 생산비 900~1,000



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가격지지제도(국경보호), 일본은 축산물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UR농산물협상에서도 이 제도의 철폐 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차근 마련되어야 하며, 양축농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원대를 유지해야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하일령 단축, 육성율 향상, 사료요구율 향상, 산자수 증가, 분만을 향상, 모돈회전율 향상 등을 통해 농장내적 생산비를 줄여 나아가야 한다.

시, 관찰하여야 한다.

나. 입법, 행정부의 역할

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가격 지지제도(국경보호), 일본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이 제도의 철폐 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은 이러한 보호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압축개방으로 농업의 포기라는 자유화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차근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전에 양축농민들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축산정책에 반영하여, 국내축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첫째, 축산원자재(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압박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 '89년도에 축산업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699억원으로 정부의 부가세 징수 전체금액 5조2천6백억원의 3.23%에 달하는데 반하여,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축산업이 부담한 국세의 3.5%에 해당하는 73억

<표11> 생산비 개선효과

구 분	생산비개선	생산비 개선 금액
출하일령 10일 단축	1%	12원
육성율 10% 향상	3%	35원
사료요구율 0.1% 향상	2%	24원
산자수 1두 증가	2%	24원
분만을 5% 향상	1%	12원
모돈회전율 0.1% 향상	1%	12원

셋째, 양돈농민들은 해당 이익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 입법부의 축산관련 정책이 양돈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관찰시켜야 한다. 현재의 복잡다기한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일반유권자들의 의사를 지역대표 원리로 정치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을 통해 양돈농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집약, 실현함으로써 세제개선, 자조금제도 실시, 금융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해 농장외적 생산비를 줄여 나가야 하며, 축산정책방향을 제

원에 불과하다.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 비용이 축산경영비 중 차지하는 점유율이 돼지 63%, 닭 71%, 한우 4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가절감 대책이 시급한 과제이며, 배합사료에 대한 세제 면에서 우리나라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만과 덴마크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다.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면 비육돈 두당 6,000원의 사료비가 절감되며, 이는 두당 생산비 10만6천원의 약 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둘째, 국산옥수수와 국산대두박을 사료원료로 사용하므로써 연간 770억원의 양축농가 부담을 주는 사료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금년도 국산옥수수의 사료원료 배정량은 69,908톤인데, 국산옥수수 가격은 kg당 490원으로 113원하는 수입옥수수 가격보다 377원(4.3배) 비싸며, 정부의 차액보상금 220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kg당 157원이 양축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내 옥수수 경작농민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농민인 양축가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옥수수 경작농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보다는 사료원가가 아닌 공업용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작년도에 수입대두박보다 kg당 100원이 비싼 kg당 260원 하는 663,325톤의 국산 대두박을 사용함으로써 양축농가는 663억원을 추가 부담하였다. 콩기름제조 3사가 외국에서 콩을 수입하여 콩기름을 짜고남은 찌꺼기를 국산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물가정책상 콩기름 가격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3사는 국제 대두가격의 인상분을 콩기름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대두박가격에 전가시키므로써 애꿎은

양축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콩기름 수요는 한정된 반면, 대두박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두박수입이 제한('91년도부터 수입자유화)됨으로써 양축농민들은 수입 대두박보다 1.6배 비싼 유지3사의 국산 대두박을 사용하여 만든 사료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농장자가배합사료를 만들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양축농민들이 간단한 자가배합시설을 갖추고, 수입곡물과 보충사료(supplement)를 구입하여 자가배합(육성, 비육사료)을 하면 유통시판 완전배합사료보다 15~20%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료제조업체도 완전배합사료만 만들어 팔 것이 아니라 보충사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동시에 양축가 지도를 통해 자가배합사료 제조방법 등을 권장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양축농민들의 자구노력의 일환인 자조금제도를 명실상부하게 실시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특정집단의 공동이익, 즉 어느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업전체의 문제를 위하여 조성, 사용되는 것이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은 무임승차자가 없이 수혜자 모두 참여하면서 수익비례의 원칙에 의해 생산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액(시판가격의 1,000분의 5이내)을 부과하고 자조금조성이 용이하고 공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용도는 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신제품 개발사업, 정책개발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이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예: 미국, 덴마크, 영국 등)들의 통례이다.

일례로 우리의 경우 12만원짜리 돼지 1,000만두에 0.1~0.5%를 부과할 경우, 조성되는 자조



세계에서 돈육수출을 많이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돈사시설에 약 30%의 정부보조를 해 주고 있다. 우리 정부도 축산시설 자동화·분뇨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양축자금을 국제수준의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규모양돈을 육성하여야 한다.

금은 연간 12억~60억에 불과하며, 이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목적에 사용할 경우 12만원짜리 돼지 1~5만두를 수매하고 나면 자금이 바닥난다.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정부재정 또는 축진기금, 농안기금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사업이다. EC의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돼지수매비축 및 방출과 일본의 축산진흥사업단에 의한 조정보관 등이 그 일례이다.

따라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을 자조금제도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책임을 양축농민에게 전가시키므로써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돼지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랐을 때 그 차액을 적립하여, 이 자금을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해 주는 보험식의 자조금발상도 정부일각에서 나왔었으나, 이것 역시 농민호주

머니 털어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의 안이한 발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돼지 생산기술이 발달한 영국이 생산물의 마케팅 면에서 덴마크에 열세를 보여 덴마크산 베이컨을 사다 먹는 것을 볼 때, 자조금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축산시설자동화, 축산분뇨처리 등에 필요한 양축자금을 국제수준의 장기저리로 융자(또는 국제수준의 정부보조)하여,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규모 양돈을 육성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돼지고기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돈사설비에 약 30%의 정부보조를 해주고 있다.

다섯째, 생산식육의 도축, 가공처리를 국제수준으로 대형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도축처리를 대형, 근대화 하여 수출산업으로 생존하는 덴마크

크의 양돈이 그 일례이다. 생산물 품질위주의 도축과 철저한 규격, 품질관리에 의한 Cut육 생산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생산물의 평가(데이터)가 농가에 환원되어 육종개량, 위생관리 등 경영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물 가격정책을 선진제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양축농가 소득제고 및 양축농민 생활수준의 향상, 축산물 시장의 안정, 축산물 공급의 확보 및 축산물가격의 적정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1) 돈육 1kg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료곡물의 세계시장 가격과, (2) 사료곡물 이외의 사료비, (3) 인건비, 건물, 수의, 의약품 등의 생산 및 판매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 분기별 수문가격을 정하는 한편, (1) 돈육 1kg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료곡물에 대한 국내와 세계시장과의 가격차를 기본수입부과금으로 하고, (2) 수문가격의 1년간 평균치의 7%에 상당하는 보호액과, (3)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수문가격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수입부과금으로 하여 이 셋을 합쳐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이 수문가격과 수입부과금 및 국내의 구조적 과잉을 발생시키지 않고 시장가격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가격(기본가 또는 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시장가격이 이 정책가격을 하회하거나, 계속해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매비축 경비를 조성하여 기본가격의 78~92%의 가격으로 돈육을 매입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산돈육을 세계 시장가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조금은 국내와 세계시장 돈육가격 및 공급상황, 국내와 세계시장의 사료곡물 코스트의 차, 국외

각국시장의 경쟁상태 및 정치적 제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돼지가격 지지제도는 1967년부터 EC 공동농업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이 정책의 고수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1971년 돈육수입자유화와 함께 “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돼지가격 안정제도와 차액관세제도를 설정, 시행함으로써 무제한의 돈육수입으로 돈가가 폭락하여 국내 생산자가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 하였다.

#### 다. 소비자의 역할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는 오늘날 소비자운동의 중심(우리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가 최근 창립)이 되고 있으며, 수입자몽의 알라검출 시비, 수입식품의 농약(방부제)사용, 수입옥수수의 아플라톡신 검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식량자급률의 저하는 경제문제인 동시에 정치문제이며, 그러한 자급률의 저하에 의한 최종의 피해는 생산자농민이 아니라 도시소비자가 입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입은 장거리 수송을 하기 때문에 첨가물, 농약의 사용이 많게 되고, 외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생산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수입식품의 중요한 문제점이다.

따라서 국내 축산물 가격이 수입축산물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지 않는 한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국가의 기초산업인 농업(축산업)을 살리는 길이며, 결국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풍요로운 녹지공간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다.

도시문제의 근원은 바로 농촌의 황폐화에 의한 이농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